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논단 1
ESG 개요



ESG경영의 추세와 대응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aelim@sogang.ac.kr)

- I. 서론
- II. ESG의 개념과 동향
- III. ESG 추진현황과 애로요인
- IV. ESG 실행의 한계와 문제점
- V. 결론과 시사점

1

I. 서론

2021년에 들어와 갑자기 ESG가 뜨거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은 총수가 신년사에서 ESG경영을 선포하였고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사적으로 ESG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SG를 도입한 대기업들은 거래 중소기업에도 ESG 기준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중소기업에게 ESG경영을 확산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중소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ESG 인증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융자와 같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준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ESG추세에 편승하여 공공사업에 ESG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ESG가 경영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ESG를 다루는 포럼과 아카데미가 우후죽순처럼 열리고 있다. 언론에는 연일 ESG에 관한 기사가 쏟아진다. ESG경영을 도입하려는 기업과 기관들이 증가하면서 컨설팅회사들은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ESG학회까지 새로 출범하였다.

이런 ESG 열풍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갈래로 엇갈린다. 신봉자들은 ESG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미래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회의론자들은 ESG를 실행할 여건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무늬만 ESG로 보여주기식(showing)의 형식적 수준에 그칠 것을 우려한다. 비판론자들은 지금까지 반짝 떴다가 사라진 수많은 경영혁신 운동과 같이 ESG도 곧 사그라질 것이라고 깎아내린다.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지 고민이다. ESG가 새롭게 등장한

II. ESG의 개념과 동향

개념은 아니다.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거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논의됐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수행해 온 친환경, CSR, CSV, 윤리경영 등도 이름만 다르지 ESG에 속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ESG로 통일되며 그 성과를 평가받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기업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의무적으로 ESG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다가왔다. 본 고에서는 ESG경영이 무엇을 의미하고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1. ESG 개념의 의미와 특징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영어 약자로 기업이 투명하고 윤리적 지배구조(G)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S) 환경친화적 활동을 수행(E)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SG는 기업경영의 활동영역과 책임범위를 기업 조직(G)→외부 사회(S)→지구환경(E)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표 1 기업경영의 책임범위와 활동영역 확대

	범위	대상	활동
G	기업 조직	직접적 이해관계자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S	외부 사회	간접적 이해관계자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 상생협력
E	지구 환경	전체 생태계	자연보호, 자원재생, 탄소중립

지배구조(G)는 기업경영의 오랜 이슈이다. 주주, 종업원, 소비자, 협력회사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이행하는 것이다. 사회(S)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환경(E)은 기업경영의 영역을 지구환경으로 넓혀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ESG는 기업경영의 주된 목표인 이윤 추구하고 거리가 있으며, 종종 상충관계에 놓인다. 지금도 ESG의 확산에 가장 큰 난관은 ESG경영에 비용이 소요되고 이익 창출 능력이 제약받아 재무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프랑스의 대표적 식음료업체인 다농(Danone)은 ESG를 중시하다 회사의 재무실적이 악화하여 CEO가 쫓겨나기도 하였다. 이 사례는 기업 경영에 ESG를 접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시하는 증거로 인용되고 있다.

ESG가 기업경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려면 ESG성과가 어떤 형태로라도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나올 수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ESG의 동향과 추세

ESG의 역사는 오래되고 그 내용은 방대하다. ESG개념은 UN이 제시하고 추구해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념에 뿌리를 둔다. UN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을 통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UN의 의제로 설정하였다(대한상공회의소·삼정KPMG 2021).

그 이후 UN은 2000년에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여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UN 국제협약(UN Global Compact, UNGC)을 발족하였다. UNGC는 환경,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전략과 활동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2006년 ESG를 투자결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하였고, 각국의 연기금과 국부 펀드를 PRI에 가입시켜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PRI원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였다. PRI에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며 이런 기준을 이용해 평가한 ESG 경영수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RI가 확산하면서 ESG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표 2 UN 책임투자원칙(PRI)의 구성요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 기후변화 - 자원고갈 - 물 - 공해 - 산림파괴	- 인권 - 현대판 노예 - 아동 근로 - 근로조건 - 노사관계	- 뇌물 및 부패 - 경영진 보수 -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 정치적 로비 및 기부 - 세무전략

* 자료: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세계 최대의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은 전세계 8500여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현황을 평가하여 AAA부터 CCC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선진국의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는 이런 ESG

등급을 고려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ESG 경영 수준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비재무적 지표로 사용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2009년 PRI에 가입하면서 ESG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들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선을 끌게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사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의 ESG 공시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 조치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ESG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공시의무화 조치와 시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너무 늦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이 ESG를 숙지하고 도입해 공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이재혁 2021).

ESG 열풍에 한국은행도 가세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ESG가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가령,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ESG 부실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민간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의 투자를 환경 분야의 전문기업에게 집중하고 있다.

ESG가 뜨겁게 달아오른 또 다른 배경은 전세계적으로 COVID-19로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전환, 미래차 대중화, 환경산업 기술혁신, 환경안전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산업 인프라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가 치솟았다.

미래 친환경 사업의 성장전망과 금융기관의 투자관행 변화가 맞물려 기업에게 기회와 위협을 제공하며 ESG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올해 시작된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ESG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III. ESG 추진 현황과 애로요인

ESG 공시 의무화와 친환경 사업기회의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ESG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주로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ESG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2021년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의 최고경영진 66.3%가 ESG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ESG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은 45.5%이며, 별도의 ESG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은 53.5%에 이른다.

대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갖고 도입하는 이유는 수익성과보다 기업이미지와 ESG 규제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조사에서 대기업들은 ESG를 도입하는 이유로 '기업이미지 제고'(43.2%)와 'ESG 규제'(18.0%)를 '수익 직결'(20.8%)보다 더 많이 거론하였다.

ESG도입에 따른 매출액 증감 전망치도 차이가 없거나(33.7%)가 5% 이내(25.7%)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대기업들은 수익이나 매출 증가보다는 이미지 관리와 ESG 규제 대응을 목적으로 ESG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기업들이 ESG경영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애로요인은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29.7%), '자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상이한 ESG평가 방식'(17.8%), '추가비용 초래'(17.8%), '지나치게 빠른 ESG규제 도입속도'(11.9%)로 밝혀졌다.

중소기업도 ESG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비용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021년 6월 3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가 ESG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실제로 준비 중인 기업은 그 절반(25.7%)에 그친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 중소기업이 ESG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는 '비용부담'(37.0%), '전문인력 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가 언급되었다.

IV. ESG 실행의 한계와 문제점

대기업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이 ESG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심각한 한계는 그 범위가 넓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가지 영역을 포괄하며 각 영역에 수많은 요소가 존재

한다. 이 많은 요소를 관리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모든 것을 잘하려 하면 방향과 초점이 분산되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요소들은 추상적이므로 정량화가 쉽지 않다. 경영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노력이 ESG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 그룹이 계열사 경영진의 성과평가와 인사고과에 ESG성과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편차가 작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것도 이런 본질적 한계에 기인한다.

흥미로운 현상은 기업들이 ESG를 추진하면서 선택적으로 자기네 상황에 맞는 하나를 골라 ESG라고 내세우는 것이다. 몇 년 동안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어느 대기업은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변경해 ESG성으로 포장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사업에 집중투자한 기업들은 친환경이 ESG성과라고 강조한다.

이런 문제는 E, S 그리고 G가 각각 별개로 구분되며 상호연관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서로 연계되어 어떻게 종합적 성과로 연결되는냐를 보여주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잘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이를 부각해 ESG성과라고 홍보한다.

ESG를 재무적 성과와 비교해 생각해 보자. 재무적 성과는 개념이 구체적이며, 매출, 비용, 이익 등의 핵심 지표만 관리하면 되니 범위가 좁고 분명하다. 또한, 매출, 비용, 이익은 정량화가 가능하며 서로서로 어떤 영향을 주어 재무성과로 연결되는지 명확하다.

ESG경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일관성있는 성과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ESG 실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재무성과는 투자수익률(ROI), 자본수익률(ROE),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ESG성과는 정성적 세부 요소들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수화하는 것에 의해 측정할 수밖에 없다.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영역의 지속가능활동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되고 신뢰성있는 ESG평가가 어려운 것이다(이인형 2021). 그밖에 산업분류 방법, 산업 간 ESG 요소의 민감도, ESG평가지표의 가중치 등의 평가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ESG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ESG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유형과 원천 그리고 수집방법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경과 사회에 관한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 외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유용하며 믿을만한 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언론 기사, 공공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고 수집하며 정리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인데 이를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자칫하면 ESG 활동 자체보다 ESG 평가에 더 많은 자원과 비용을 들어야 할 판국이다.

이런 한계로 인하여 ESG 평가의 강건성(robustness)이 취약하며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달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ESG성적을 평가하는 지표가 난립하며 각각의 평가체계가 상이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야기한다.

ESG 역사가 제일 오래된 미국에서도 ESG 평가기관마다 평가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ESG평가기관들의 평가 등급에 격차가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길남 2021).

이에 대응하여 산업통산자원부는 ‘한국형 ESG 지표체계’(K-ESG)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개발한 평가지표가 ESG평가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정부의 새로운 평가지표가 더해지는 것이 혼란을 해소할지 아니면 더 키울지는 두고 볼 일이다.

V. 결론과 시사점

ESG는 이제 초기 도입단계이다. 아직은 ESG경영의 실행을 뒷받침할 이론 연구나 실증분석이 미흡한 상황이다. ESG를 대대적으로 확산하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ESG 성과모델이 개발되고 더불어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기반과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ESG를 도입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ESG경영이 도입단계에서 넘어 관행과 표준으로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ESG경영이 선언적으로 도입될 뿐이며 실행과 확산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ESG의 추세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이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문제는 ESG의 도입을 유도하는 정책과 제도가 긍정적 보상보다는 부정적 규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ESG 성과가 높은 경우 제공되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약한 반면, 저조한 경우 부과되는 처벌은 과중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안전관리에 소

홀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비윤리적이며 부패 문화가 만연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현재 입법화되었거나 상정되어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전기안전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지배규제 3법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ESG의 추세에서 당근보다 채찍에 무게 중심을 두는 제도적 변화는 기업에게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안전한 방법은 ESG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재무성과를 비롯해 다른 것을 다 잘하더라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한 요소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SG는 단기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추세로 정착될 것이다. 지금부터 ESG경영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나중에 ESG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산업별로 가치사슬의 여건에 맞춰 ESG의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업에서의 ESG 경영 이슈는 친환경 자재 구매(친환경 인증 목자재, 재활용 콘크리트 등), LCA(Life Cycle Assessment) 기반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빌딩 건축, 근로자 안전 및 건강관리로 파악되고 있다(이준희 2021). 주로 환경(E)과 사회(S)에 관한 이슈들인데 여기에 지배구조(G)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지배구조라 하면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만 생각하지만 넓게 보면 기업간 거래관계도 지배구조에 포함된다. 건설업에서 친환경 건축과 작업환경의 안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하도급 거래관계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발주처-원청 모기업-하청 협력회사 간의 지배구조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ESG는 요원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상공회의소·삼정KPMG (2021),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2. 남길남 (2021), “ESG 평가 격차와 지배구조 평가 이슈” 자본시장 포커스 2021-19호, 자본시장연구원.
3. 이인형 (2021), “ESG 평가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이슈보고서 21-09, 자본시장연구원.
4. 이재혁 (2021), “ESG 경영 정착을 위한 ESG생태계 구성원의 역할”,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3호, 2021년 7월.
5. 이준희 (2020), “한국기업들의 ESG경영을 위한 변화”, Deloitte Insights, 딜로이트 안회계법인.
6.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ESG 준비실태 및 인식조사”.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 “중소 ESG경영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KOSME 이슈포커스 2021-08호.